

---

##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방향

---

2019. 4. 1.

금 융 위 원 회  
금 융 혁 신 기 획 단

## 목 차

I. 추진 배경 .....	1
II. 준비 상황 .....	3
1. 사전심사 추진 경과 .....	3
2. 우선심사 대상 혁신금융서비스 주요특징 .....	4
3. 우선심사 대상 혁신금융서비스 주요내용 .....	6
III. 향후 추진일정 및 운영방향 .....	9
1. 추진 일정 .....	9
2. 운영 방향 .....	10
[참고 1] 금융혁신지원법령 상세내용 .....	11
[참고 2]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 절차 .....	15
[별 첨]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혁신 추진전략 .....	16

## I. 추진 배경

- 정부는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4대 분야\*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단계적으로 시행 중

\* 금융(금융위), ICT(과기정통부), 산업분야(산업부), 지역특구(중기부)

- '18.3월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을 위한 4법을 발의하였으며, 정부·여야 등의 협의를 거쳐 국회 입법조치를 완료\*

\*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은 '19.1.17일부터 시행중이며, 금융혁신법(4.1일)과 지역특구법(4.17일)은 4월 중 순차적으로 시행 예정

- 금융산업의 경우 규제 수준이 높고 엄격하며 복잡·다양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출현에 장벽과 애로로 작용

\* 인허가 제도, 각종 영업행위 규제 등으로 제약

- 영국, 호주 등 금융선진국이 운영 중인 샌드박스를 금융혁신 지원특별법 제정\*을 통해 우리 금융분야에 도입

\* 규정중심 법체계인 우리나라의 경우, 규제면제에 대한 금융당국의 재량이 제한적이므로 실효성 있는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

### < 주요 선진국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사례 >

- [영국] '15.11월 금융행위감독청(FCA)이 **Regulatory Sandbox** 도입방안 발표 ('16.7월 이후 회차별로 신청을 받아 1~4차 테스트 진행)
- [호주] 증권투자위원회(ASIC) 소관 규정과 관련하여 **제한인가, 대리인, 규제 미 실시 제도** 등 운영
- [싱가포르] '16.6월 통화청(MAS)이 **'핀테크 금융규제 샌드박스 가이드라인'** 마련
- [일본] '18.5월 생산성 향상 목적으로 **프로젝트형 규제샌드박스** 시행

- 「금융혁신지원특별법」 국회통과('18.12.7일) 이후, 하위법령 제정 등을 신속히 마무리하여 금일('19.4.1일)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

⇒ 핀테크기업과 금융회사의 금융혁신(Digital Transformation)을 촉진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국민 편의 향상

## 금융규제 샌드박스 주요내용

### 1. 금융규제 샌드박스 (혁신금융서비스 지정)

□ (개요) 새롭고 혁신적인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금융법상 인허가 및 영업행위 등 규제를 최대 4년간(2+2년) 적용유예·면제

- 관련 정부기관,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혁신심사위원회\*에서 지정 여부를 우선 심사하고,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지정

\* (위원장) 금융위원장 (위원) 관계부처 차관 민간전문가(기술금융/법률/소비자분야)

□ (소비자보호·감독) 시범영업에 따른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책임을 부과하고 영업과정을 감독

- 사업자가 소비자보호 및 위험관리 방안을 마련·준수토록 하고,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시 적합성 여부를 심사

\* 서비스 제공현황 정기보고 및 모니터링 / 서비스 변경·중지명령 등 금융위 조치

- 사업자 배상여력 부족에 대비하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

□ (테스트 후속조치) 기간 종료 시 규제특례는 원칙 종료되나,

- 시장안착을 위해 인허가 심사 절차를 지원하고 입법조치 권고와 배타적 운영권(2년이내) 부여 가능

### 2. 기타 지원 제도

① (지정대리인 제도)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가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위탁받아 혁신금융서비스 시범운영(최대 2년)

② (규제신속확인 제도)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가 금융당국에 해당 서비스에 관한 특정 법령 적용 여부 등 확인 신청

③ (혁신금융서비스 지원제도)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의 사업 운영·유지 비용을 예산으로 지원

※ (참고 1) 금융혁신지원특별법령 상세내용

## II. 준비 상황

### 1 사전신청 추진 경과

① (사전신청) 그간 금융위·금감원은 혁신금융서비스 조기 출시를 위해 법 시행 이전부터 선제적으로 제도 도입을 준비

- 규제샌드박스 사전신청(1.21 ~ 1.31) 접수 결과, 시장의 적극적 관심으로 88개사가 105개 서비스 신청

\* 88개사(금융사 15개, 핀테크 73개), 105개 서비스(금융사 27개, 핀테크 78개)

② (우선심사 대상 선정) 효율적·압축적 심사를 위해 우선심사 대상과 일반심사 대상을 구분하여 진행

- 금융위·금감원은 ①우선심사 대상 선정기준 및 ②법상 심사요건 검토 등을 통해 19건의 우선심사 대상을 선정

#### ① [우선심사 대상 선정 기준]

적극적 요건	소극적 요건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▪ 기존 서비스와 충분한 차별성이 있는지 여부 등 <b>혁신성 여부</b></li><li>▪ 금융회사/핀테크 기업 간 적절한 안배 및 <b>핀테크 분야별</b> 합리적 배분</li><li>▪ 혁신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<b>사전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여부</b></li><li>▪ 소비자 편익, 사회적 관심도 등 <b>파급효과</b> 큰 과제 우선검토</li>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▪ 단순 규제완화 요청 등 <b>규제샌드박스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</b></li><li>▪ 부처협의 등 시일이 오래 걸리는 <b>타부처 소관 과제</b></li><li>▪ <b>사안이 복잡하여 검토에 오랜시간 소요가 예상되는 경우</b></li><li>▪ <b>시장질서저해, 소비자 피해 가능성</b> 큰 경우</li></ul>

② [금융혁신법상 심사요건] ①서비스의 혁신성 ②소비자 편익 증대여부 ③금융혁신법 적용의 불가피성 ④사업자의 업무영위 능력 ⑤소비자 보호방안의 충분성 ⑥금융시장 및 금융질서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등

③ (혁신위 위원보고) 혁신위 소위\*에 금융위·금감원의 실무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우선심사 대상을 논의(3.25일, 3.28일)

\* 기술·금융, 법률, 소비자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혁신위 민간위원(15인)

## 2 우선심사 대상 서비스 주요특징

- ◆ 다양한 분야의 신기술·신사업 테스트를 통해, 혁신의 편익이 소비자와 사회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치는지 고려
  - **[혁신]**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의 사업성 시장 검증, 기존 방식에 대한 과감한 도전을 시도하는 서비스인지 여부
  - **[포용]** 건전성 등의 이유로 기존 금융권이 소극적이었던 新서비스 제공으로 금융의 접근성, 이용부담을 줄이는지 여부
  - **[시너지]** 금융산업 뿐만 아니라 타 산업과 사회·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긍정적인지 여부

1 (다양한 분야에서 선정) 특정 유형에 집중되지 않고 다양한 서비스가 출현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19건 선정

- 대출(5건)\*, 보험(2건), 자본시장(3건), 여전(3건), 은행(2건), 데이터(2건), 전자금융(1건), P2P(1건) 등 금융업권별 서비스를 다양하게 선정

\* 대출모집인 1사 전속주의에 대한 규제특례 신청 건이 많아, 상대적으로 다수 선정

2 (기존 규제개선 요청사항) 그간 업계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규제완화 요구가 제기되었던 사항을 우선적으로 검토·반영

- 「대출모집인 모범규준」의 '1사 전속주의' 규제, 「여전법」의 신용카드 가맹점 규제, 「보험업법」의 보험판매 규제 등에 특례

- **[1사 전속주의 규제특례]** 소비자가 하나의 모바일 플랫폼에서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상품 금리 등 조건을 확인·비교하고 최적의 대출조건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(핀다, 비바리퍼블리카, NHN페이코, 핀테크, 핀셋 등)
- **[신용카드 관련 규제특례]** 경조사비 등과 같이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없이 이루어지는 개인간 송금서비스 허용 (신한카드), 사업자 미등록 개인 판매자(영세상인)가 모바일 플랫폼 QR을 활용하여 카드 수납하는 서비스 (BC카드)
- **[보험판매 규제특례]** 해외여행자 보험 등을 필요한 순간에만 보장을 개시·종료할 수 있는 스위치(on-off) 방식 보험가입·해지 서비스 (농협손보, 레이니스트)

③ (신기술·신사업 테스트) 빅데이터, AI, 블록체인 등 신기술의 금융서비스 활용·접목 가능성에 대한 적극적인 테스트 지원

- 인공지능(AI) 기술과 다양한 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활용 범위 확대, 자본시장에서의 블록체인 기술 활용 등 테스트

- **[빅데이터·AI]** 신용카드 가맹점정보를 개인사업자의 신용평가에 활용하는 서비스, AI를 통해 실시간 회계정보를 활용한 신용정보 제공 등 (신한카드 더존비즈온 등)
- **[블록체인]** 초기기업의 주주명부를 블록체인화하고, 이를 기반으로 장외에서 투자자들이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플랫폼 제공 (코스콤)
- **[블록체인]** 블록체인을 활용한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 플랫폼(카사코리아) 및 주식대차 중개 플랫폼(디렉셔널)을 통해 새로운 투자기회 제공

④ (융합 시너지, 긍정적 파급효과) 금융과 산업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, 타 산업과 사회전반에 미치는 긍정적 파급효과 등 고려

- 금융과 통신서비스의 융합 허용, 신재생 에너지 발전사업에 지역주민의 고수익 투자기회를 제공하는 P2P금융 서비스 등

- **[금융과 통신의 융합]** 은행의 부수업무로 이동통신망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은행이 알뜰폰을 이용한 금융·통신 결합서비스 제공 (KB은행)
- **[신재생에너지 사업 투자]** 태양광,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지역주민이 투자자로 참여하여 고수익을 창출하는 P2P금융서비스 (루트에너지)

⑤ (다양한 이용자의 편익) 개인사업자, 초기기업, 일반 국민 등 다양한 소비자에게 혁신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서비스 선정

- 영세·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절감, 초기기업의 자금조달 지원, 일반 국민의 금융서비스 이용편의 제고 등을 고려

- **[개인 사업자]** 신용카드 단말기가 없어도 되는 모바일 플랫폼(페이콧), QR코드를 통한 카드 수납 확대 등을 통해 영세·소상공인의 비용부담 절감
- **[초기 기업]** 장외 비상장 주식 거래를 활성화하여 VC, 엔젤 투자자, 액셀러레이터 등의 투자를 확대, 초기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
- **[일반 국민]** 자동차번호판으로 결제하는 Drive Thru 환전·인출 서비스(우리은행), SMS인증을 통한 온라인 간편결제(페이플) 등 보다 편리한 간편결제 서비스 확대

## 3

## 우선심사 대상 혁신금융서비스 주요내용

※ 향후, 신청서 보완제출, 혁신위 심사 및 금융위 회의 과정에서 일부 수정될 수 있음

구분	업체명	신청서비스 주요내용
은행	국민은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서비스 개요) 금융과 이동통신(알뜰폰)서비스를 결합하여 USIM칩만 넣으면 공인인증서, 모바일 플랫폼 설치 등 복잡한 절차없이 은행서비스와 통신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</li> <li>• (규제특례) 은행이 이동통신망사업을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신청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현행 규제: 은행법 해석상 알뜰폰 사업은 은행 고유업무와 관련 없어 부수업무 인정 불가</li> </ul> </li> <li>• (혁신성·이용자편익) 금융업과 통신업의 첫번째 융합사례로서, USIM에 은행 자체 인증기술을 탑재하여 공인인증서나 통신사 중심의 모바일 인증과 차별화</li> </ul>
	우리은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서비스 개요) 은행지점 방문 없이 차량에 탑승한 채로 Drive Thru 요식업체, 공항 인근 주차장 등에서 환전·현금인출(100만원 미만) 서비스 제공</li> <li>• (규제특례) 환전 및 현금 인출 서비스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특례신청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현행 규제: 금융기관 업무위탁규정상 입금·지급, 외국환 업무는 은행업의 본질적 업무로서 제3자에게 위탁 불가</li> </ul> </li> <li>• (혁신성·이용자편익) 은행지점 방문 없이 차 안에서 환전·현금인출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환전·현금인출 서비스 이용자의 편의성, 금융 접근성 개선</li> </ul>
자본 시장	카사 코리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서비스 개요)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하여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을 디지털화하고 이를 일반투자자에게 발행·유통하는 서비스</li> <li>• (규제특례) 자본시장법상 ①부동산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, ②디지털 증권의 증권성 인정 ③거래소 허가없이 서비스 제공, ④투자중개업 인가 면제 요청</li> <li>• (혁신성·이용자편익) 일반국민이 부동산 수익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 확대, 블록체인을 통해 거래구조 단순화 및 비용절감을 통한 투자수익률 제고</li> </ul>
	코스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서비스 개요) 비상장 초기 혁신·중소기업의 주주명부 관리 및 장외 거래 편의성 제고를 위한 서비스</li> <li>• (규제특례) 기업 주식은 금융투자상품(지분증권)에 해당되고 금융투자상품 중개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 필요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블록체인을 활용한 비상장 주식거래는 처음 시도되는 분야인 만큼, 사전테스트 필요</li> </ul> </li> <li>• (혁신성·이용자편익) 비상장 초기 기업의 주주명부 실시간 확인, 비상장 주식거래 활성화에 기여하여 비상장 초기 기업의 중간 회수시장으로 기능</li> </ul>
	디렉셔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서비스 개요) 블록체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에게 주식대여·차입기회 제공</li> <li>• (규제특례)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 없이도 증권 대차거래, 중개·주선 또는 대리를 할 수 있도록 특례신청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현행 규제 : 자본시장법상 증권 대차거래와 중개·주선, 대리를 위해서는 투자 중개업 인가를 받도록 규정</li> </ul> </li> <li>• (혁신성·이용자편익) 실시간 호가 테이블을 통해 개인간 주식대차 기회 확대, 합리적 시장가격 형성, 블록체인의 자본시장 활용가능성 테스트</li> </ul>



구분	업체명	신청서비스 주요내용
보험	농협손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(서비스 개요) 해외여행자 보험을 <b>연간단위로 포괄가입</b> 후, 여행기간만을 입력받아 보험계약 내용 설명 등 <b>별도 절차 없이 보험 가입 가능</b></li> <li>(규제특례) ①<b>반복적인 보험가입단계 설명의무 면제</b>, ②<b>공인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신청</b>            * 현행 규제: ①보험법상 보험계약을 모집할 때마다 소비자에게 계약의 중요사항 설명하고 서명받도록 규정, ②사이버몰(온라인)을 이용하여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청약 내용에 대해 공인전자서명 등을 통해 확인받도록 의무화</li> <li>(혁신성·이용자편익) 보험 가입절차를 반복적으로 거칠 필요가 없어, <b>해외여행자보험 가입의 간편성 제고</b></li> </ul>
	레이니스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(서비스 개요) 해외여행자 보험 등을 <b>특정기간 내 반복적으로 재가입</b> 하는 경우, <b>별도절차 없이 가입/해지(on/off)</b> 가능한 서비스</li> <li>(규제특례) ①<b>반복적인 보험가입단계 설명의무 면제</b>, ②<b>공인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신청</b>            * 현행 규제: ①보험법상 보험계약을 모집할 때마다 소비자에게 계약의 중요사항 설명하고 서명받도록 규정, ②사이버몰(온라인)을 이용하여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청약 내용에 대해 공인전자서명 등을 통해 확인받도록 의무화</li> <li>(혁신성·이용자편익) 보험 가입절차를 반복적으로 거칠 필요가 없어 <b>해외여행자보험 가입의 간편성 제고</b></li> </ul>
여신 전문	신한카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(서비스 개요) 모바일 플랫폼을 이용한 <b>신용카드 기반의 개인간 송금서비스</b></li> <li>(규제특례)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도 <b>신용카드 기반의 송금 서비스</b>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신청            * 현행 규제: 여전법상 신용카드 가맹점은 물품 판매, 용역 제공 등을 하는 자에 한정</li> <li>(혁신성·이용자편익) 계좌잔액이 없어도 <b>본인 신용한도 내에서 별도로 부여된 송금한도 범위 내에서 송금 가능</b></li> </ul>
	BC카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(서비스 개요) <b>사업자 미등록 개인 판매자의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</b>을 허용하여 <b>QR기반의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</b>를 제공</li> <li>(규제특례) <b>사업자 미등록 개인도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허용</b> 요청            * 현행 규제: 여전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 한해 신용카드 가맹점 관련규정 적용</li> <li>(혁신성·이용자편익) 노점상 등에서도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결제편의성 향상, 가맹점 제시형 QR을 통해 <b>낮은 수수료율</b> 적용 가능</li> </ul>
	페이콧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(서비스 개요) <b>NFC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단말기를 스마트폰 모바일 플랫폼으로 구현</b></li> <li>(규제특례) 여전법상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정하는 보안성 인증 특례 요청            * 현행 규제: 소프트웨어 단말기(스마트폰 플랫폼)의 보안성 인증 기준이 없음</li> <li>(혁신성·이용자편익) 스마트폰 <b>NFC를 이용한 소프트웨어 기반의 카드 단말기</b>를 구현, 카드 단말기의 <b>물리적 제약을 해소</b>하고 <b>유지관리 비용 절감</b> 가능</li> </ul>
대출 시장	핀다, 바바리퍼블리카, NHN페이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(서비스 개요) 소비자가 모바일 플랫폼에서 <b>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조건</b>을 한 번에 <b>확인·비교</b>하고 그 중 소비자가 가장 원하는 <b>대출조건을 선택</b>하여 대출 신청</li> <li>(규제특례)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기준에 따른 <b>1사 전속원칙*</b> 특례신청            * 현행 규제: 대출모집인은 하나의 금융회사에만 소속되는 전속 관계를 맺어야 함</li> <li>(혁신성·이용자편익) 소비자가 여러 <b>대출조건을 비교</b>하여 그 중 가장 적합한 대출을 <b>간편하게 선택</b> 가능</li> </ul>

구분	업체명	신청서비스 주요내용
대출 시장	핀테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(서비스 개요) 차량번호, 고객 신용정보, 기타 데이터 등을 반영하여 자동차 금융상품 조건을 산출하고, 고객 동의시 금융회사에 동 조건의 확약을 요청</li> <li>(규제특례)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에 따른 1사 전속원칙 등 특례신청</li> <li>(혁신성·이용자편익) 소득·재직 및 자동차 관련 서류를 모바일 플랫폼에서 자동 취득하여 선택한 금융회사에 전달함으로써 편리성 증대, 차량정보·고객 운전정보 등 분석을 통해 맞춤형 금융상품을 안내</li> </ul>
	핀셋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(서비스 개요) 고객 신용·소득 분석을 통한 대출금리·한도비교, 자문서비스 제공</li> <li>(규제특례)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에 따른 1사 전속원칙 등 특례신청</li> <li>(혁신성·이용자편익) 고객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맞춤형 금융상품 정보 제공, 개인별 부채 통합관리를 통한 차주의 신용상 불이익 방지</li> </ul>
데 이 터	신한카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(서비스 개요) 카드사가 가맹점정보를 활용하여 영세·소규모 개인사업자 신용평가, 컨설팅 제공</li> <li>(규제특례) 신용조회업 허가에 대한 특례 신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현행 규제 : 신용정보법상 카드사는 신용조회업 허가대상에 미포함</li> </ul> </li> <li>(혁신성·이용자편익)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평가 정확성·금융접근성 제고</li> </ul>
	더존비즈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(서비스 개요) 비외감중소기업 등으로부터 수집된 회계기장 정보를 활용한 신용정보의 제공 및 신용평가모형 개발</li> <li>(규제특례) 신용조회업 허가에 대한 특례 신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현행 규제 : 신용정보법상 금융회사 출자가 없는 일반기업 등은 신용조회업 허가대상에 미포함</li> </ul> </li> <li>(혁신성·이용자편익) 기존 금융데이터에 비해 적시성과 차별성이 있는 회계정보가 새로이 유통됨에 따라 비외감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 제고,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가능</li> </ul>
전자 금융 / 보안	페이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(서비스 개요) 온라인 쇼핑물 등에서 SMS 인증을 활용한 소비자의 출금 동의를 거쳐 계좌를 등록하고 간편하게 결제하는 서비스</li> <li>(규제특례) ①SMS 인증을 통한 추심이체 출금동의 인정, ②소규모 전자금융업 등록요건 완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현행 규제 : 전자금융법상 ①추심이체 출금동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서면, 전자서면, 전화녹취, ARS 방식으로 한정, ②소규모 전자금융업 등록 요건 (자본금 3억, 전산업무 종사 경력 2년 이상인 임직원 5명)</li> </ul> </li> <li>(혁신성·이용자편익) 계좌이체 출금동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온라인 결제의 편의성 증대, 소규모 혁신적 스타트업의 전자금융업 원활한 진입</li> </ul>
P2P	루트에너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(서비스 개요) 태양광,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지역 주민 (우대금리 제공)과 국민들이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P2P금융 서비스</li> <li>(규제특례) 신재생에너지 사업규모 등 특수성을 고려하여 P2P대출 가이드 라인상 개인투자자 투자한도 확대 요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현행 규제 : 일반 개인은 P2P업체당 1천만원, 차입자당 5백만원 소득적격 개인은 P2P업체당 4천만원, 차입자당 2천만원</li> </ul> </li> <li>(혁신성·이용자편익) 대규모 SOC사업에 지역주민이 높은 수익률로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기회 제공, 지역사업 주민참여 모델 제시, 지역경제 활성화</li> </ul>

### Ⅲ. 향후 추진일정 및 운영 방향

#### 1 추진 일정



#### 가. 우선심사 대상 19건 ⇨ 4월중 처리

□ 4.1일 법시행후, 1차 신청공고(4.2~4.4일, 잠정)를 통해 정식 접수

\* 1월중 사전접수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, 법 시행 이후 정식 신청 필요

○ 정식접수 후 2차례에 걸쳐 혁신위 심사 및 금융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4월중 마무리 예정

\* 1차지정 : 혁신위(4.8) → 금융위(4.17) / 2차지정 : 혁신위(4.22) → 금융위(5.2)

#### 나. 일반심사 대상 86건 ⇨ 5~6월중 처리, 상반기중 마무리

□ 우선심사 대상(19건)외 사전신청건(86건)은 일반심사 절차 진행

○ 우선심사 대상 지정 마무리 즉시, 4월말~5월초(잠정) 2차 신청 공고를 통해 접수 후 상반기중(5~6월중) 추가 지정 진행

#### 다. 추가심사 대상 + α건 ⇨ 5~6월중 컨설팅, 6월 접수, 하반기 처리

□ 일반심사 처리기간(5~6월) 중 사전설명회, 컨설팅 실시

□ 일반심사 지정절차가 마무리된 즉시, 6월중 신청공고를 통해 접수를 받아 하반기 중 신속 처리 예정

⇒ 연중 중단없는 샌드박스 업무 추진을 통해 신청수요에 대해 상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수립·운영

## 2 운영 방향

### 1 신속·상시적인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

- 혁신금융서비스 조기 출현을 위해,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 진행
- 시장수요에 상시 대응하여 연중 중단없는 샌드박스 운영

### 2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혁신서비스 심사 기준 적용

- 새로운 기술과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실험 기회 부여
  - 조건부과<sup>①</sup>, 단계적 테스트<sup>②</sup> 등을 적극 활용
- \* ① 이용자수, 거래금액, 거래횟수 등 제한적 허용
- ② 엄격한 조건하에 테스트 실시 후, 허용·확대여부, 추가조건 부과  
(예 :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상대매매 등)
-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일괄 심사제도를 도입하고, 입법 추진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사전 준비 기회 제공 등
- 샌드박스 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, 규제신속확인 제도, 지정대리인 제도 등을 상황에 맞게 활용하도록 유도

### 3 금융규제 샌드박스 결과를 제도 및 규제 개선으로 연결

- 법령상 규제, 행정지도, 모범규준 등 규제개혁 병행 추진
- 진입규제·업무방식 개선을 통해 아이디어의 사업화 기회 제공

### 4 금융규제 샌드박스 비용·공간 제공 / 투자 및 글로벌화 지원

- 테스트비용 재정 지원, 핀테크 Lab 등을 통한 공간 제공
- 혁신투자펀드 등 투자 연계, 해외진출 지원 컨설팅 등

### 5 샌드박스 운영과정 모니터링 및 컨설팅 제공

- 샌드박스 지정기관에 대한 테스트 과정 모니터링을 강화하고, 테스트 이후 인허가 등 사업화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
- \* 혁신서비스 미지정자에 대한 설명, 보완지원 상담 등 멘토링
- 또한, 실험기간 중 금융보안, 고객데이터 보호 등을 적극 지원하여 소비자 보호에도 만전

## 가.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제도 : 규제 샌드박스

### 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

- (신청자격) 핀테크 기업(상법상 회사)과 금융회사등(은행·보험·금투업자, 전금업자 등, 금융업 영위 공사·기금\*, 금융권 협회 등)(제5조)

\* 주금공, 신보, 농신보, 예보, 자산관리공사, 기보, 예탁원, 거래소

- (신청 서비스) 기존 금융서비스와 제공 내용·방식·형태 등의 차별성이 인정되는 서비스(이하 '혁신금융서비스')(제2조제4호)

### ② 혁신금융서비스 심사·지정

- (심사·지정 주체)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되, 산하에 혁신금융서비스의 심사를 위한 '혁신금융심사위원회\*' 설치(제13조①)

※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구성 (25인 이내)

#### ① 당연직 위원

- (위원장) 금융위원회 위원장

- (정부위원) 관계부처 차관(급) 공무원

\* 국조실, 기재부, 샌드박스 관련부처(금융위, 과기부, 산업부, 중기부)로 구성

- (유관기관) 금융감독원 부원장, 핀테크지원센터장

#### ② 민간 위촉위원(15명 내외) : 기술·금융/법률/소비자분야 전문가

-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신청자,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청취(제15조)

- 민간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 가능

-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·해촉 근거 마련

- (심사기준) ①서비스 혁신성 ②소비자 편익 증대여부 ③금융혁신법 적용의 불가피성 ④사업자의 업무영위 능력 ⑤소비자보호방안의 충분성 ⑥금융시장 및 금융질서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등(제13조④)

### ③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의 효과

- (규제특례) 지정받은 기간 내에 영위하는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특례가 인정된 해당 금융규제는 적용되지 않음(제17조①)
  - 인허가·등록·신고, 지배구조·업무범위·건전성·영업행위, 사업자 감독·검사 등 금융관련법령 규제 전반에 대해 폭넓게 특례 인정
  - \* 타 부처 소관 법령의 규제특례는 법령 소관부처의 동의를 받아 지정
- (특례 제외대상) 다만, 소비자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 발생 우려, 금융질서 안정성 저해 우려 등이 있는 경우, 특례인정 불가(제17조②)

### ④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소비자보호

- (감독·제재) 테스트 환경에 적합하게 구성된 특별법 규정\* 적용 (제7조, 제29조, 제33~35조)
  - \* 예 : 지정내용을 벗어나서 테스트를 실시한 경우 지정취소, 형사처벌 등 제재
  - 혁신금융서비스 제공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소비자 피해, 금융시장 혼란 우려가 있을 경우 지도·시정
  - 소비자 피해 발생 등 비상상황시 중지명령, 변경조치(제11조)
- (소비자보호방안 마련) 사업자에게 소비자보호 및 위험관리 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방안이 충분한 경우에만 테스트 허용 (제13조, 제19조)
  - 사업자는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시 소비자보호 방안\* 등을 함께 제출
  - \* 이용자의 범위 제한, 거래위험 고지, 분쟁처리 절차 마련 등
- (소비자 권리구제) 사업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용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(입증책임 전환)하고 사업자의 배상 여력이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책임이행 보장장치 마련(제27조)

-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,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배상 책임을 부담하나,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, 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(입증책임 전환\*)(제27조①)

\* 민사소송원칙에 따르면 손해배상요건을 충족함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나, 입증책임 전환 시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사업자가 입증 필요

- 사업자에게 배상책임 이행 보험 가입을 의무화(제27조②)하고, 가입 불가할 경우 사유서와 손해배상계획서를 금융위에 제출 필요
- 사업자가 이용자와 계약 체결 시, 손해배상 신청을 받은 경우 이용자에 책임보험 가입여부(또는 배상계획서 내용) 안내의무 부과

## 5] 테스트 종료후 후속조치 : 검증된 서비스의 시장 안착 지원

- (지정효과 실효) 테스트 기간(최대 2년 이내에서 지정시 결정) 종료시 규제특례는 종료\*(제9조)

\* 기타 종료 사유 : 지정 취소, 합병 등으로 인한 조직변경, 자진철회 등

- 다만, 필요성 인정 시, 1회에 한해 최대 2년 연장가능(제10조)

- (시장안착 지원) 인허가 심사 지원 및 제도개선 신속 추진

- 테스트기간 중 인허가 또는 등록요건 일부가 충족되었음을 확인한 경우 의견제시 등을 통해 심사 절차 지원(제21조②)

- 시범서비스의 정식 시장출시를 위해 관련법령 제개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 혁신심사위원회가 입법조치 권고(제13조⑤)

- (배타적 운영권) 혁신금융사업자는 인허가 완료 후 최대 2년 이내에서 다른 사업자가 동일 서비스를 출시할 수 없도록 요구할 수 있음(제23조)

---

## 나. 기타 제도 : 지정대리인 제도, 규제신속 확인제도

---

### ① 규제신속 확인제도(제24조)

-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금융위에 해당 서비스와 관련된 법령 등\*의 적용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

\* 법령, 행정규칙, 그 밖에 행정기관에 권한을 부여한 모든 규정

- 금융위는 소관 법령 등에 대해서는 직접, 다른 행정기관 소관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의견을 받아 신청인에게 회신

\* 특히, 그간 타부처 소관에 대해서는 비조치의견서 제도를 적극 활용하지 않았으나, 금융혁신법 제정으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짐

### ② 지정대리인 제도 : 본질적 업무 위탁 허용(제25조)

- 금융위는 서비스의 혁신성, 소비자 편익 등이 인정되는 경우 서비스를 테스트하려는 핀테크기업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
- 금융회사는 지정대리인의 테스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정대리인에게 본질적 업무 위탁 가능
- 금융회사는 업무위탁자로서 수탁자인 지정대리인을 관리·감독하여 이용자 피해 및 위험발생 방지

---

## 다. 혁신금융서비스 예산 지원 근거 마련

---

-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을 통해 핀테크기업 등에 대해 지원될 수 있도록,

- 정부가 예산 등으로 혁신적 금융서비스 지원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는 근거 마련(제26조)
- 이를 지급받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이 목적 외의 용도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사용하면 이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함



지정 절차 흐름도

신청 단계

① 신청 자격

- 「상법」상 회사(국내 영업소 在)
- 금융회사 등(금융회사, 전자금융업자 등, 금융업을 영위하는 공사·기금 등)

② 신청 기간

- 금융위의 서비스별 또는 회차별 신청기간 공고

③ 신청서 제출

- 금융위에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

④ 보완 요구

- 금융위/금감원은 미비사항·소명부족에 대한 보완 요구

⑤ 관계부처 통보

- 금융위는 관계부처에 신청 내용을 통보

심사 단계

① 금감원(실무단) 사전 검토

- 지정 신청의 심사기준 충족 여부를 사전 검토
- 효율적 심사를 위해 실무단 운영 가능

② 금융위 실무단 사전 검토

-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 前에 실무단을 통해 사전 검토

③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

- 법 제13조제4항 심사기준을 고려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심사
- 신청자, 이해관계자,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가능

지정 단계

① 금융위 지정 절차

-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와 관계부처의 동의 요

② 지정기간·내용·조건

- 2년 범위 내 지정(1회 限, 2년 이내 연장 가능)
- 업무범위·대상·방법, 감독·검사, 지정기간 등 지정
- 소비자보호·금융시장 안정 등 위해 조건 부과 可

③ 지정 공고

- 금융위는 지정시 지체 없이 관보 게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

## 별첨

##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혁신 추진전략

전략 1	금융규제샌드박스 적극 운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'금융규제 샌드박스' 운영</li> <li>• 금융회사 핵심업무 위탁 지정대리인 제도 운영 지속</li> <li>• 핀테크 지원예산(79억원)으로 테스트 비용 등 지원</li> </ul>
전략 2	넓은규제 · 복합규제 과감한 혁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'핀테크 현장 금요미팅' 통한 상시적 규제 발굴</li> <li>• 법령상 규제 · 그림자 규제 등 전면 혁신(200여건)</li> <li>• 근본적으로 진입규제 개편 검토(Small License)</li> </ul>
전략 3	핀테크 분야 투자 · 지원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규제·절차 제약 해소</li> <li>• 혁신투자펀드 연계 확대, 핀테크랩 지원 내실화</li> <li>• 핀테크 인재양성 및 창업 청년 업무공간 지원 확대</li> </ul>
전략 4	핀테크 신시장 개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금융결제망 혁신적 개방 등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</li> <li>• 지급지시서비스업(PISP) 등 전자금융업 개편 추진</li> <li>• 빅데이터, 마이데이터 등을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</li> <li>• P2P대출 법제화 추진</li> </ul>
전략 5	글로벌 핀테크 영토 확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금융분야 신남방정책, "핀테크 로드" 구축</li> <li>• Korea Fintech Week 2019 (5.23~25) 개최</li> </ul>
전략 6	디지털 금융 보안 · 보호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디지털 금융 리스크 확대에 대응하는 금융보안</li> <li>• 빅데이터, 오픈 API 등 활성화에 따른 정보보호</li> <li>• 디지털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</li> </ul>